

2026 지자체 연계형 정책연구 수요조사서

지자체	원주	제안부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정책분야 (연관 주요 분야 모두 선택)	☐ 산업·경제 ☐ 문화·관광 ☐ 환경·에너지 ☐ 도시·교통 ☒ 복지·보건 ☐ 교육·인재 ☐ 농림·지역개발 ☐ 기타()		
연구주제 (과제명)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탈시설 욕구조사 및 자립지원 정책방안 연구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2027년 3월 「장애인의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과 주거전환 체계 마련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시설 중심 보호에서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지속적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자체 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욕구와 지원 필요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자립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관내에는 장애인거주시설 6개소가 운영 중이며, 총 222명(26.7월기준)의 이용자가 생활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 이용자의 장애유형, 연령, 건강상태, 의사소통 능력, 자립 의향, 주거전환 가능성, 가족 및 후견인 의견,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자료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탈시설 정책은 단순한 시설 퇴소 지원을 넘어 주거, 돌봄, 건강, 소득, 고용, 이동, 권익옹호 등 다양한 영역의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함. 따라서 시설 이용자의 개별 욕구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 내 자원 현황과 서비스 공급 여건을 함께 분석하여 단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고, 향후 법 시행과 정부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 및 요구사항	1.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분석 -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6개소의 운영 현황, 이용자 수, 장애유형, 연령, 성별, 입소기간, 지원인력 및 개별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기초자료 분석 - 시설별 자립지원 관련 기존 프로그램 및 퇴소지원 경험 조사 2. 시설 이용자 탈시설 및 자립생활 욕구조사		

	-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222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의향, 지역 사회 거주 희망 여부, 희망 주거형태,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 의료·건강관리 욕구, 소득·고용 욕구, 사회활동 및 관계망 욕구 등 조사 -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보호자, 후견인, 시설 종사자 등 보조응답을 병행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가 반영될 수 있는 조사 방식 마련 3. 가족, 보호자, 후견인 및 시설 종사자 의견수렴 - 시설 이용자의 자립생활에 대한 가족·보호자·후견인의 인식, 우려 사항, 지원 필요사항 조사 -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탈시설 지원 과정의 현장 애로사항, 필요 서비스, 지자체 지원 과제 등 의견수렴 4. 지역사회 자립지원 자원 및 서비스 체계 분석 - 공공임대주택, 지원주택,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등 주거자원 현황 분석 -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장애인일자리, 정신건강·의료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자원 조사 - 지역 내 서비스 공급 가능성과 사각지대 분석 5. 탈시설 및 주거전환 지원대상 유형화 - 이용자의 자립 의향,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결정 지원 필요도, 가족 지지체계,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대상 유형 분류 - 단기·중기·장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군 구분 및 단계별 지원방향 제시 6. 지자체 맞춤형 자립지원 정책방안 도출 - 2027년 법 시행에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추진체계, 전담인력, 협력 기관, 예산 확보방안 제시 - 시설 이용자별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모형 제안 - 지역사회 거주전환을 위한 주거, 돌봄, 건강, 소득, 고용, 권익옹호 등 통합지원 방안 마련 - 탈시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및 위기대응 체계 제시 7. 실행계획 및 정책 로드맵 마련 -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 추진과제 제시 - 중앙정부 공모사업, 국·도비 연계사업, 민관협력사업 등 활용 가능한 재원 및 사업 연계방안 제안 - 정책 시행 이후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지표 제시
연구결과 활용계획	- 2027년 3월 「장애인의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장애인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6개소, 이용자 222명에 대한 실태와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우선지원 대상자 발굴에 활용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주거지원, 활동지원, 건강관리, 일자리, 사회참여, 권익옹호 등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의 근거자료로 활용 - 지자체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 및 보완에 반영 - 중앙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시범사업 신청 시 정책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 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거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자료로 활용 - 향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전환, 지역사회 기반 주거모델 도입,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운영 등 신규사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 - 원주시 장애인복지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효과	-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정책 수립이 가능해짐. - 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 차원의 사전 준비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정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 - 시설 이용자의 특성과 지원 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무리한 탈시설이 아닌 단계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전환 지원 - 주거, 돌봄, 의료, 소득, 고용, 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에 기여 - 장애인거주시설, 가족(보호자), 지역사회 서비스기관,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탈시설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위험요인 예방 체계 구축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주거선택권, 지역사회 참여권을 보장하고,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 기여 - 향후 지자체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자립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